

성범죄 수사 피해자 무고 혐의 일단 배제

앞으로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관련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무고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폭력 피해 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수사지침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될 경우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매뉴얼을 최근 전국

무고 수사, 성폭력 수사 종결시까지 중단 지난 11일 성범죄대책위 권고 따른 조치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부 등에 배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위법성 조각이란 잘못은 있지만 공익적 목적이 커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관련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인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

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대책위는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

日 90세 여성운전자 차량돌진사고 1명 사망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보도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고령자 운전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8일 오전 10시 55분쯤이다. 가나가와 현 치가사키시 국도에서 90세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로 돌진해 6명을 치었다. 병원에 실려간 6명 중 50대 여성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한 여성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운전한 90세 여성이 고객이라는 현지 정비업체 관계자는 "체력이 정상이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해 운전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운전도 너무 난폭하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극히 보통으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검사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3년에 1번 면허 갱신 시에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사 대상자를 '치매 우려가 있다',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3단계로 분류해 각 단계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75세 이상 운전자(운전면허 보유자)의 규모는 약 540만명으로, 이 중 26만677명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난간 매달린 아이 구한 '파리스파이더맨'

지난 26일 저녁(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아파트 4층(한국식으로는 5층) 발코니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남자아이를 구한 출신 22살 이주 남성이 프랑스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미루두 가사마리는 이 남성은 지난 26일 파리 18구역을 걸어가던 중 한 아파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 4살 남자 아이 한 명이 아파트 4층 발코니에 언제 떨어질지 모른 채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다. 옆집 남성이 발코니에서 아이를 구조하려 하고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아래에 모인 사람들도 구조할 수 없어 발만 뚫고 구르는 실정이었다.

가사마리는 지체없이 아이를 향해 아파트 벽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발코니를 잡고 오르기 시작한 그는 불과 1분도 안 돼 아이가 매달려 있던 4층 발코니에 도달했고 무사히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사마리가 아이를 구출한 뒤였다.

가사마리는 지체없이 아이를 향해 아파트 벽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발코니를 잡고 오르기 시작한 그는 불과 1분도 안 돼 아이가 매달려 있던 4층 발코니에 도달했고 무사히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사마리가 아이를 구출한 뒤였다.

가사마리가 발코니를 올라 아이를 구조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8일 가사마리를 엘리제궁으로 초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도 가사마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해 하며 그를 "18구역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며 그의 영웅적 구출 행동을 칭찬했다. 그녀는 가사마리의 영웅적 행동을 모든 파리 시민들에게 모범이 됐으며 몇 달 전 새 삶을 찾아 말리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가사마리가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사마리는 어린아이가 위험하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를 올라갔으며 아이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용암, 지열발전소 우물까지 접근

미국 하와이 주 하와이섬(일명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 나온 용암이 지열발전소에 도달했다.

27일(현지시간) CBS뉴스는 용암과 섞여 독성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껑을 덮어놓은 지열발전소 우물에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닿았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메이스 연방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용암은 하룻밤 사이에 대지의 방어선을 돌파했고, 지금 가장 가까운 우물에서 200야드(약 182.88m)이 내에 있다"고 말했다.

안전 위험에 대한 질문에 메이스 대변인은 "당국은 화산 폭발이 시작된 이후로 용암이 발전소 부지로 흘러들어가는데 대해 우려해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 칼레이키니 발전소 대변인은 하와이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용암은 우물에서 130피트(약 39.624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며 유독가스인 황화수소 방출에 대한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휴식' 대책 마련 촉구

광주·전남어린이집연합회

광주·전남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된 것은 환영하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러 연합회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돼야 할 점심시간에 영유아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 준비 등 활동을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을 불법자로 만들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최소 1인 이상 보조교사 배치를 위한 정부 추경안 편성,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 증지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즐거움 물놀이 서울지역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학폭 가해자부모 특별교육 미이수시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교육부, 학폭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해 교육감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FO)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은 학교봉사·전화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주체, 선발기준과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도 개정안에 담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관한 제 31조의2항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했다. 또 경찰청장이 청소년 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 확인 및 대상 학생 선도·관리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학교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청력검진

구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종료되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